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 www.hansungnews.com |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제627호

지면안내

03 사회 일상 속을 파고든 디지털성범죄

04 기획 부캉이에게 '부'며들다!

05 사람人 돌봄의 무게를 'N인분'하다

08 기획 좁은 교실의 외침 프랑스를 뒤흔들다

학사·행정 부문 논의된 타운홀 미팅 개최

지난 10월 28일, '제6회 한성대학교 타운홀 미팅(이하 타운홀 미팅)'이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대학본부 관계자 18명과 학생 대표 16명이 자리한 이번 행사에서는 학사 및 장학 부문 안건과 시설 및 행정 부문 안건 등 두 개의 분야를 거쳐 안건이 발표됐다.

학사 및 장학 부문 안건

- 등록금 인상 여부 및 배분 기준
- AI 필수 교양 교과목 체계 개편
- 수강신청 교과목 정보 불일치 개선
- 졸업요건 이수 현황 관리 기능 구축
- 캡스톤 디자인 지원금 단가 현실화
- AI 활용 공통 지침 수립
- 예체능 교양 교과목 확대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대학본부 관계자와 학생대표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향후 등록금 인상 추진 여부와 확보될 추가 재원의 배분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정윤지(문콘 4) 총학생회장은 "현재 본교 등록금이 타 대학에 비해 낮아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추가 재원이 어떤 분야에 우선 투자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은주 기획조정처장은 "내년도 등록금 인상 방향은 미정이며, 현재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도록 계획됐기에 향후 2개월 내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확보된 재원은 학생 여건 개선에 최우선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원 총장은 "본교의 재정 여건과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과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는 AI 교양 체계 도입을 요청했다. 강민성(ICT 4) 부총학생회장은 "AI 중심 대학이라는 비전에 맞춰 AI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나 모든 학생이 AI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양 교육은 아직 부족하다"며 "AI의 작동 원리와 활용법, 데이터 리터러시 등을 포함한 필수 교양 과목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지현(상상력교양대학 교학팀) 팀장은 "현재 2027, 2028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개편안에 개별 맞춤형 AI 교육과 실습 융합 학습 확대 방안이 반영돼 있다"며 "개편을 통해 AI 기초 기술 습득 능력을 강화하고 AI 활용 융합 문제 해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자인대학(이하 디대) 학생회는 수강신청 안내서와 종합정보시스템 간 교과목 정보 및 이수 구분이 다른 불일치 문제를 질의했다. 최혜린(패션 3) 디대 학생회장은 "수강신청 안내 책자와 종합정보시스템 간 교과목 정보 불일치로 일반선택 과목이 전공필수로 변경되는 등 학생 수강 계획 수립 및 졸업 요건 확인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며 "트랙별 교과목 정보와 이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문석 교육혁신처장은 "홈페이지 및 수강신청 온라인 공지 내용을 개편하고 안내 책자 및 공문 자료에도 누락 없이 반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석(학사운영팀) 팀장은 "수강신청 정보 안내 책자는 발행 시점이 5월이기에 이후 개정 사항이 반영된다"고 말하며 "공지 및 온라인 시스템 간 교차 검사를 강화해 모호함과 정보 누락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학생회는 학과별 졸업요건 이수 현황 확인 및 관리 기능을 요구했다. 유선우(문콘 4) 창의대 학생회장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격증, 시험과 같은 트랙·학과(부) 세부 졸업 요건의 충족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지도교수와 직접 상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7학기 이하 학생은 졸업요건 조회가 불가능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현재 학사 매뉴얼 및 졸업 요건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참고해 졸업 요건 증빙 자료 업로드 화면을 편리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7학기 이하 학생들의 졸업 가사정 조회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며 "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복지위원회는 캡스톤 디자인 지원금 지급 안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서은우(문콘 3) 위원장은 "물가 상승에도 지원금 단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학생들이 재료비 등을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정산 진행 상황을 확인할 방법도 없어 학과 사무실이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도 겪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조 처장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추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 팀장은 "추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안내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술대) 학생회는 대학 차원의 AI 활용 기준 명시를 제안했다. 하헌구(무용 3) 인문예술대 학생회장은 "과목마다 AI 활용 기준이 달라 학생들이 AI 사용 가능 여부와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한다"며 "대학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조 처장은 "교원 대상 AI 활용 워크숍을 확대하고 혼합 교과목 개편 상황을 공유하며 구조화해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 팀장은 "타 대학교 사례를 벤치마킹해 AI 윤리 지침 및 세부 안내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사과대 비대위)는 예체능 교과목 확대를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김대훈(사회과학 3) 사과대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문예·체육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접하기 어려운 분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소양 교양 교과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이에 대해 "2027학년도 교양 교육 과정 개편안에 예체능 실습 중심 교과목을 편성하고 소양 교양 영역을 3학점 필수 이수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2면에 계속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이예원 기자 ywpass@naver.com

학사구조 개편 후 첫 실기고사 진행



▲회화과 실기고사를 응시 중인 학생들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실기고사(이하 실기고사)가 지난 10월 17일·18일과 24일에 걸쳐 진행됐다. 17일은 무용학과(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18일은 AI융합디자인학부, 24일은 회화과(동양화, 서양화)의 신입생 선발을 위한 실기고사가 이뤄졌다. 모집 인원은 총 128명, 지원 인원은 총 2,821명으로 최종 경쟁률은 22.04:1이었으며 ▲낙산관 ▲상상관 ▲탐구관 ▲한성여고에서 실기고사가 실시됐다.

이번 실기고사는 지난해와 달리 AI융합디자인학부의 고사 종목이 총 3개에서 1개로 축소됐다. 이는 지난 4월, 학사구조 개편으로 기존 ICT디자인학부가 AI융합디자인학부로 개편되고 야간 과정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기존 주간 과정에서 시행되던 '기초디자인', '창의적표현' 종목과 야간 과정의 '게임상황표현' 종목이 '기초디자인' 한 종목으로 통합돼 시행됐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부모 등 외부인은 고사장 출입이 통제됐으며 별도의 학부모 대기실은 마련되지 않았다. 무용과 실기고사를 응시한 윤세빈(17) 학생은 "준비한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해 아쉽지만 시험을 마치게 돼 후련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대학원 학칙, 연계과정 확대하고 학사구조 재편된다

『대학원 학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6일 본교 홈페이지 학칙개정공지사항에 「학칙 개정(안)」이 공고됐다. 개정안에는 ▲학·석·박 통합연계과정 신설 ▲글로벌융합대학원 신설 ▲대학원별 모집 정원 조정 ▲학과 및 전공 개편 등의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은 2027학년도 대학원 입학전형 시행을 위한 조치다. 전민우(대학원 교학팀) 팀장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으로 대학원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학·석·박 통합연계과정이 신설됐다. 제8장에 따르면 해당 과정은 학부 재학 중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 이후 대학원으로 진학해 학업과 연구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해당 과정은 기존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연계 범위가 확대된 제도다. 본교 학부 과정에서 4학기 이상 등록하고 평점 평균 3.5 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생은 학부 재학 중 대학원 교과목을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 팀장은 "학·석·박 통합연계과정은 학부와 대학원 간 연계를 강화해 대학원 진학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학·석사 연계과정의 선발인원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됐다. 학·석사 연계과정은 학부생이 대학원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해 이수하는 제도로, 학부에서 대학원 교과목을 미리 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과정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다. 변경된 학·석사 연계과정의 모집인원이나 학위과정, 대학원별 모집 정원 등은 2027학년도부터 반영한다. 전 팀장은 "학·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 통합연계과정은 기술과 지식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분야에서 학부와 대학원 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학·석·박 통합연계과정 학칙 개정안은 규정류 심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별표 1〉에 글로벌융합대학원이 신설됐다.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소속이던 글로벌AI경영컨설팅학과는 글로벌융합대학원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또한 브랜드컨텐츠디자인학과가 새롭게 편성돼 코스메틱크리에이티브와 브랜드컨텐츠디자인 전공을 운영한다. 두 학과는 글로벌융합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에도 포함됐으며, 2027학년도부터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팀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교류하고 성장하는 본교 대학원만의 차별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반대학원의 학과 및 전공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박사과정에는 AI응용학과가 신설됐다. 산업경영공학과의 경영공학 전공은 산업공학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안전 및 인간공학 전공은 삭제됐다. 국제이주협력학과는 기존 국제이주협력 전공을 국제이주와 국제개발협력으로 세분화했다. 석사과정에는 미래모빌리티학과를 새롭게 편성했으며 산업경영공학과에 AI·CRM 전공을 추가했다. 반면 IT융합공학과와 미디어디자인학과의 영상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은 삭제됐다. 특수대학원에서는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 과학기술정책 전공을 추가했으며 예술대학원 글로벌뷰티학과는 폐지했다.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모집정원에 조정이 이뤄졌다. 일반대학원은 박사과정 정원 3명, 석사과정 정원 12명이 늘어 총 15명이 증원됐다. 특수대학원의 경우 행정대학원 정원 3명, 예술대학원 정원 1명, 국방과학대학원 정원 10명, 교육대학원 정원 1명이 줄어 총 15명이 감축됐다. 전 팀장은 "대학원별 정원 충원 현황 및 교육 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위과정 및 대학원별 모집정원을 재배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별표 2〉에 학과 및 학위 구분 변동사항이 반영됐다. 기존 석사과정만 운영하던 AI응용학과는 박사과정까지 확대해 공학박사학위 수여 과정을 추가했다. 석사과정에는 미래모빌리티학과를 신설하고 공학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했으며, 기존 IT융합공학과는 삭제됐다.

특수대학원의 학위 종류를 규정한 〈별표 2-1〉에도 변경사항이 존재한다. 새롭게 편성된 글로벌융합대학원의 브랜드컨텐츠디자인학과에는 예술학석사학위가 추가됐다. 또한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는 별도 전공 구분이 없이 부동산학석사학위를 수여하던 방식에서 부동산도시개발·관리와 스마트부동산관리 전공으로 세분화됐다. 각 전공에는 부동산학석사학위와 주택관리학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이규림 기자 kyulimo@naver.com

다양한 건의 속 타운홀 미팅 성료

총장 "지속적인 소통으로 학생 지원 이어갈 것"

시설 및 행정 부문 안건

- 실습용 맥 장비 확충 및 지원 강화
- 학내 자체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 인성관 동아리 야간 자율 이용 허용
- 창의관 소강당 및 체육 시설 보수

IT공과대학(이하 공대) 학생회는 맥 장비 수량 확대를 요청했다. 김동현(기계전자 3) 공대 학생회장은 "본교에 맥 장비가 일부 있지만 이용하기에는 수량이 부족하다"며 "교내 맥 장비가 더 확보되면 학생들의 실습과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두연(IT공과대학 교학팀) 팀원은 "개인 기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설정 오류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강 전 실습 PC에 프로그램이 일괄 설치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중집(학생복지팀) 팀장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 돼야 기자재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는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이하 총선거)에 사용할 자체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김현진(문콘 4) 총대의장은 "매년 420만 원가량의 학생 자치 예산이 외부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료로 지출된다"며 "외부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오민호(디지털혁신팀) 팀장은 "총선거에 사용하는 전자투표 시스템은 연간 사용 빈도가 낮아 자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따른 인력 및 비용 부담과 민원 대응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타당성과 보안성을 재검토해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황수민 기자

▲타운홀 미팅 종료 후 촬영한 단체사진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동아리 활동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인성관 야간 잔류 제한의 완화를 건의했다. 황유빈(뷰티 4) 동연회장은 "동아리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 장시간 또는 야간 연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야간 잔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조 팀장은 "과거 화재 사고와 일부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었으나, 출입 관리 및 보안 강화를 전제로 대체 공간 확보 및 시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안전 시스템 보안성과 필요성을 검토 후 정책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원 총장 역시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창의관 소강당 내 고장 난 음향 스피커, 사다리 방치 및 노후 체육 매트로 인한 부상 위험 문제가 건의됐다. 조혜진(문콘 4) 동연부회장은 "노후화된 매트로 인해 표면이 미끄럽고 수평 유지 기능이 저하돼 이용자 부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장재혁 총무처장은 "사다리는 동아리 소유 품목이 포함돼 있기에 동아리 측과 협의 후 구분하고, 매트는 추가 점검을 시행해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이예원 기자 ywpass@naver.com

학생 목소리에 귀 기울인 'Lunch with the President'



사진 : 김가현 기자

▲'Lunch with the President'에 참여한 대학본부 관계자 및 본교 재학생들

본교 재학생과 총장이 식사와 대담을 함께하는 'Lunch with the President' 행사가 상상관 12층 '케이키친 한상'과 상상관 9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4일 개최됐다. 행사에는 이창원 총장, 김진환 교학부총장, 김지현 대외협력부총장 등을 포함한 대학본부 관계자 6명과 재학생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상관 12층 '케이키친 한상'에서 오찬을 즐긴 후 상상관 9층 대회의실로 이동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질문과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먼저 다양한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성현(사회과학 4) 학생은 "현재의 비교과 포인트 등이 특수 직종 희망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권상집 학생진로취업처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본교 내 외국인 유학생만의 경쟁력에 관해 질문했다. 차밍에르덴(글로벌 1) 학생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학생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총장은 "국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AI의 발전에 따른 개발자 직무의 방향성도 다뤄졌다. 홍성훈(컴공 2) 학생은 "AI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전공 트랙을 변경하는 등 진로에 대해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교학부총장은 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의 기본 지식과 AI를 활용하는 방식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창돈(기계전자 3) 학생은 "추천받은 프로그램으로 가치 있는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다"며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희원 기자 huiwonjang7@gmail.com

밀을 통해 경험하는 성북구의 매력

지난 23·24일 양일간 '2026 성북밀로장(이하 성북밀로장)'이 성북동 일대에서 개최됐다. 성북밀로장은 밀을 기반으로 한 식문화를 매개로 개발한 로컬브랜드 '성북밀로'를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재단에서 주최 및 주관한 행사다.

행사 첫날에는 개막 행사인 '모두의 식탁'이 성북역사문화공원에서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됐다. 모두의 식탁에서는 성북문화재단과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추진한 '성북밀로 요리학교: 문학을 요리하다'의 성과를 공유했다.



▲부스를 운영 중인 ICT디자인학부 학생들

행사 둘째 날에는 본 행사인 '밀로 식탁'이 성북동 양조장 거리를 비롯한 골목 곳곳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본교 ICT디자인학부 학생들을 비롯해 다양한 외부 상점들이 부스를 운영했다. 본교 학생들은 '한성대학교 지역문제해결디자인랩 전시'와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인 '밀랑이의 비밀레시피'등을 진행했다. 지역문제해결디자인랩 전시는 학생들이 성북동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책을 전시를 통해 제시한다. 밀랑이의 비밀레시피는 어린이들이 골목 곳곳을 이동하며 성북밀로를 경험할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이다. 부스를 운영한 이정현(ICT 4) 학생은 "지역문제해결형 디자인랩이라는 캡스톤 수업을 1학기 때 들었는데 해당 수업에서 성북밀로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채택돼 참여했다"며 "지역구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권예준(29) 행사 참여자는 "동네에 성북밀로장과 같은 축제가 있어 접근성도 좋고 어른, 아이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운영한 정지은(성북문화재단 문화도서정책추진단) 단장은 "성북동은 프랜차이즈가 거의 없는 로컬 특징이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성북동의 매력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ayeonkimm@naver.com

지역주민 찾아가는 대학 인문 강연

'성북문화재단 인문지식프로젝트'가 오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아리랑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성북구 주요 5개 대학이 보유한 인문지식과 전문성을 지역주민과 연결하기 위해 총 5회차로 구성된 인문강연 프로그램이다. 법·문학·의학·기술·철학 등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교수진이 익숙한 주제를 새롭게 융합해 풀어낸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에게는 한 회차당 비교과 포인트 10pt가 지급된다.

올해는 '다른 시선, 새로운 질문'을 주제로 본교를 비롯해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가 참여한다. 강연을 진행하는 교수진은 각 대학 도서관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본교에서는 조재우(사회과학부) 교수가 오는 20일 '블록체인 다시보기: 기술이 바꾸는 신뢰의 방식'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주영(학술정보관) 담당자는 "지역주민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인지 고려해 교수를 추천했으며, 각 대학의 강연 주제에서 공통점을 찾아 프로젝트의 전체 주제를 선정했다"고 술회했다.

박민영(성북문화재단 도서관기획팀) 담당자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이번 강연의 목표라고 밝혔다. "도서관을 매개로 대학의 인문자원을 공유하고, 교수의 전문 지식을 다른 대학 학생과 지역주민에게도 나누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학의 지식 자원이 도서관을 매개로 지역의 자산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희원 기자 huiwonjang7@gmail.com

한 성 대 신 문

마음속에 머물던 생각, 글로 남겨보세요

독자칼럼 모집

지원자격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 제 자유 주제

분 량 제목 제외, 공백 포함 1,100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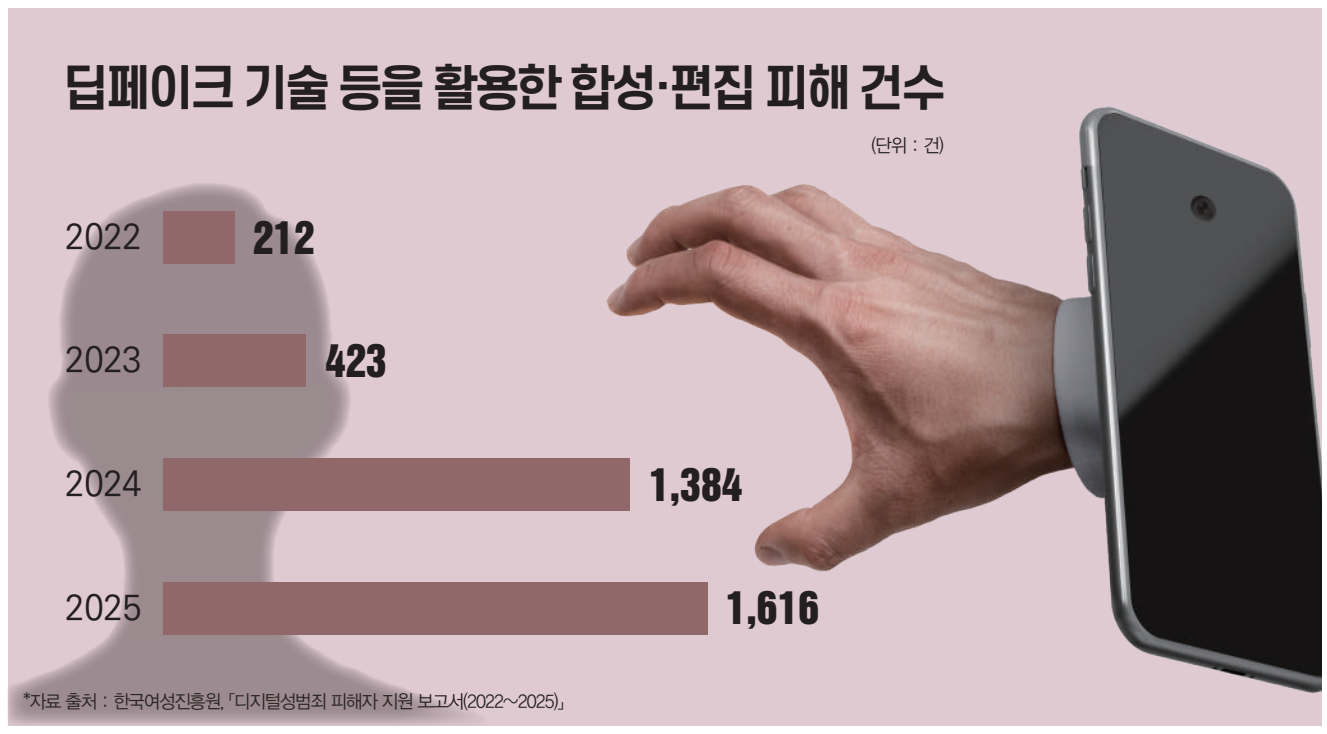
혜 택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신문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상시 모집

접수방법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해 hansungnews@gmail.com으로 제출

문 의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일상 속을 파고든 디지털성범죄



대학가에 디지털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2020년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마련됐으나, 범죄는 플랫폼과 수법을 바꿔가며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 수법은 더욱 정교해지는 반면, 이를 규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장치는 답보 상태다.

디지털성범죄는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 촬영(비동의 촬영)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불법합성·편집(딥페이크) ▲유포·협박 등으로 나뉜다.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해 성적 이미지로 합성·유포하며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가 분업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연쇄적인 범죄 구조를 띤다. 한민경(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성범죄는 보이스피싱 범행처럼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 등이 서로를 알지 못하는 연쇄적인 범죄계층구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기술의 급성장으로 피해 대상도 이전보다 더 어리고 취약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여성진흥원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는 2023년 대비 2025년 282% 증가했으며, 이 중 피해자 연령은 전 연령대 중 20대가 4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4년에는 서울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인하대학교 딥페이크 사건은 같은 대학 동기 17명을 대상으로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허위 성착취물을 270여 차례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지난 3월 고려대학교와 6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도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가장 먼저 만성적인 법체계의 분산 문제가 지적된다. 디지털성범죄는 하나의 연속된 범행이지만, 『성폭력처벌법』 등의 현행법은 불법 촬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등 범행 유형별로 처벌 조항을 구분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대법원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제시해 협박한 행위에 대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협박에 사용된 사진이 피해자의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지원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운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은 일회성 상담이나 삭제 요청에 그치지 않고, 영상물의 재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사·법률·의료 지원까지 연계해야 하는 장기적인 업무다. 그러나 2026년 기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규 인력은 4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역 피해 지원 기관의 인력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며 업무가 과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원상(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피해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업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운영 여건까지 달라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디지털성범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통계 체계도 미흡하다. 현재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은 국내 주요 국가승인통계를 통합해 제공하지만, 디지털성범죄의 발생 규모와 피해 양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어렵다. 경찰의 범죄 신고 건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건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정보 심의 건수 등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집계돼 분산되기 때문이다. 결국 객관적인 통계의 부재는 실태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가로막고, 국가 대응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성범죄물의 유통과 착취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됐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다. 불법 플랫폼은 성범죄물을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고, 유료 회원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동일 운영자가 여러 사이트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조직화하고 있다. 기존 대응은 개별 영상물의 삭제와 접속 차단에 집중돼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유통망 자체를 해체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범죄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불법 콘텐츠의 삭제만으로는 범죄의 재생산을 막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 교수는 "특히 성범죄물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유통망의 적발성이 낮은 편"이라며 "국내에서도 대형 서버로부터 범죄 수익을 환수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분절된 디지털성범죄 규정은 새로운 범죄 수법이 등장할 때마다 개별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온 데서 비롯된다. 정부는 새로운 범죄 수법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 법률에 개별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형사법은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여러 행위가 결합된 범죄라도 개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개별 행위의 법적 판단이 실제 범행의 전체적인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범죄의 특수성이 고려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 교육 기반이 미비한 점도 디지털성범죄 관련 인력난의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피해자 지원 기관이 피해 영상물 삭제, 상담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기존 종사자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 지원과 인력 양성 업무가 일부 기관에 집중되고 신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교육 기반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한(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대표는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인데 반해 예산은 매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디지털성범죄의 종합적 통계가 부재한 문제는 복합 범죄를 집계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하나의 범죄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하는 전통적인 범죄 통계 작성 체계 탓에 디지털성범죄를 역시 제대로 집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디지털성범죄는 한 번의 유포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송효종(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수사기관의 범죄 통계 집계 과정이 하나의 사건에 주된 범죄 한 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돼 있다"며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주된 범죄 이외의 나머지 범죄들은 기록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이트의 수익 구조를 차단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사후 차단 체계가 자리한다. 현행 대응은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 요구를 거쳐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심의를 거쳐 삭제·접속차단 등을 요청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가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국내 차단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따른다. 한 교수는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한 경우라도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총책을 잡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술회했다.

범죄 유형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개별 범죄 수법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나 영상물을 제작·변형·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처벌 요건을 정비하는 형태다. 2022년 영국 법률위원회는 기존의 법률이 디지털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적용 중이다.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력 양성 경로도 마련돼야 한다. 피해 지원 업무는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디지털 기술 대응 등 복합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특정 기관의 교육에 의존하기보다 대학과 전문 교육기관, 피해자 지원 기관 등을 연계한 다각적인 양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론 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해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토대가 된다. 이원상 교수는 "처벌 수위만 높일 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인력을 위해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예산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를 독립적인 통계 항목으로 설정하고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건별로 여러 범죄 유형과 관련 정보를 함께 기록할 수 있는 통계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미국의 범죄보고체계인 NIBRS를 차용해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범죄를 각각 기록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수집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송 교수는 "통계 항목을 세분화하고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야 범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술회했다.

개별 콘텐츠의 삭제와 접속 차단을 넘어 불법 사이트의 운영 기반과 수익 구조를 직접 차단하는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불법 사이트가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서버를 이전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광고와 결제 수단을 통한 범죄 수익의 유입 경로도 차단하는 식이다. 이원상 교수는 "센터가 적극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가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작은 제보가 한성의 큰 파동을 만듭니다
제보하기
02)760-4186
hansungnews@gmail.com
@hansungnews
@hansungnews

부캉이에게 '부'며들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1

"부캉이 지금 있나?" 지나가던 시민이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북항친수공원에 직접 방문해 보니 우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민이 무언가를 찾으며 수로를 들여다 보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흑상어 '부캉이'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기에 부캉이라는 이름까지 붙으며 무명의 상어 한 마리는 단숨에 지역의 명물로 등극했다.

북항친수공원은 부캉이를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기존에는 주말 평균 약 2,000명 정도 방문하던 공원이었지만 이후 하루 최대 약 10만 명이 몰려들며 한 달간 무려 170만 명 이상 방문했다.

부캉이의 인기가 관광객의 방문으로 이어진 것은 야생동물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한 결과다. 부캉이는 언제든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인 만큼 관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된 만큼 부캉이를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발걸음을 옮긴다. 지금 방문하지 않으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심리가 사람들의 방문을 촉진했다. 일반적인 관광 명소와 달리 볼 수 있는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오히려 희소성을 만들어냈다. 북항친수공원에 방문한 아주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서연(22) 씨는 "부캉이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며 "희소성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캉이를 향한 관심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도 이어졌다. 이노아(국립부경대학교 시스템경영안전공학부) 연구원은 부캉이의 현재 위치와 출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캉이 어디 있나'라는 웹사이트를 개발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부산 지역 커뮤니티에선 시민들이 직접 부캉이의 위치나 상태 등을 공유하며 근황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를 나눴다. 시민들은 관광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참여자로 변화하고 있다. 부캉이를 보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온 고태경(20) 씨는 "실제로 사이트를 이용해보니 부캉이의 최신 소식부터 현재 위치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신기했다"며 "직접 제보를 해보진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직접 참여해 볼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도 부캉이를 이용한 지역 홍보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다. 부산광역시 시내버스인 5-1번 버스는 상어를 테마로 외관을 꾸몄으며, 부산광역시는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상어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이어 나갔다. 특히 부산광역시 동구는 구정 소식에 '부캉이의 소원'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돔구장 유치 기원 서명운동을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관광브랜드와 지자체로의 관심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기업들도 부캉이 열풍에 연달아 동참했다. 상어의 모습을 본뜬 상품인 과자 '고래밥'과 아이스크림 '죠스바' 등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부산 지역 소주 기업인 '대선주조'는 부캉이 에디션 제품을 출시했다. 조연주(나봄미디어심리연구소) 대표는 "동일한 동물을 좋아하는 집단과의 정서적 연대 의식을 물리적 형태로 소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해 관련 상품 구매로 이어진다"고 답했다.

다만 동물 팬덤을 통한 관광 활성화가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특정 동물의 인기에 의존하는 관광은 해당 동물이 사라지는 순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캉이의 소식이 뜸해진 이후 하루 약 10만 명씩 방문하던 북항친수공원은 하루 1만 명 수준의 방문객을 보이고 있다. 최미연(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이란 우연한 화제를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바꾸기 위해선 동물을 볼거리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 지역을 다시 방문할 이유를 만드는 데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던 부캉이는 북항친수공원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북항친수공원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한 부캉이는 지난 24일엔 2km 떨어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다. 이후 27일 시민의 마 지막 제보를 끝으로 부캉이를 봤다는 목격 제보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했지만 끝내 목격하지 못했다. 북항친수공원에 방문한 김민준(24) 씨는 "부캉이가 완전히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와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그래도 넓은 바다로 돌아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2 사진 : 황수민 기자



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1 북항친수공원에 나타난 부캉이
2 상어로 외관이 꾸며진 부산 시내버스
3 관람객이 푸바오를 보며 즐거워 한다.

이제는 동물을 덕질하는 시대

동물이 시대를 풍미하기 시작했다. 부산 북항친수공원의 상어 '부캉이'부터 에버랜드의 판다 '푸바오', 대전 오월드의 늑대 '늑구'까지 동물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거기에 더해 이들의 일상을 공유하며 팬을 자처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단순히 동물을 귀여워하는 것을 넘어, 특정 동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른바 '동물 팬덤 문화'가 다시금 떠오르는 것이다. 동물 팬덤 문화는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마치 하나의 '팬'과 같이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동물 팬덤 현상은 비단 부캉이만의 일이 아니었다. 2020년엔 에버랜드의 판다 '푸바오'가 전국민적 사랑을 받았고, 올해 4월에는 대전 오월드의 늑대 '늑구'가 많은 관심을 받은 바가 있다. 이원영(극지연구소 빙하지권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답했다.

동물 팬덤의 인기는 단순히 사람들의 열광을 넘어 기업의 마케팅 요소로도 활용된다. 의류 브랜드인 '에잇세컨즈'는 푸바오와 협업한 상품을 출시했다. 대전에 연고지를 둔 야구팀 '한화 이글즈'와 부산이 연고지인 '롯데 자이언츠'는 각 지역에서 화제를 모았던 늑구와 부캉이를 이용해 마케팅을 벌였다. 소비자들도 관련 상품을 구매하며 팬심을 드러내곤 한다. 조연주(나봄미디어심리연구소) 대표는 "팬덤 마케팅 상품의 구매는 단순 소비가 아닌 정체성 표현과 소속감 확증의 행위다"며 "관련 상품을 소장하면서 긍정적 감정을 일상에서 재확인하고, 같은 집단과의 정서적 연대의식을 물리적 형태로 소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을 향한 관심이 일회성 화제를 넘어 팬덤으로 확장되는 배경에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서사가 존재한다. 푸바오는 탄생과 이별의 이야기가, 늑구는 탈출과 자유의 이야기가 있었다. 부캉이는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 상어를 마주한다는 비일상적인 경험이 서사로 작용했다. 동물 자체의 외형이나 행동뿐 아니라 그 동물이 처한 상황과 이를 둘러싼 이야기가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다. 조 대표는 "서사는 단순한 구경거리를 관계적 대상으로 바꾸는 미디어적 장치"라며 "동물 서사에 자신이나 타인의 삶을 입혀 감정 몰입을 하게 돼 팬덤의 강력한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간이 동물에게 감정 등을 투영하는 '의인화' 역시 팬덤 형성의 요인으로 꼽힌다. 사람들은 동물의 행동을 인간의 감정과 의도에 빗대어 해석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며 친숙한 존재로 받아들인다. 부캉이 역시 화제를 모은 뒤 이름을 얻게 되며 단순한 한 마리의 상어에서 '부캉이'라는 특별한 개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최미연(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의인화는 낯선 동물을 익숙한 감정을 통해 이해하는 방식"이라며 "동물의 행동에 의미를 붙이면 행동이 이해하기 쉬워지고 심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진다"고 전했다.

현대인들로 하여금 정치·사회적 갈등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피로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인기의 배경으로 꼽힌다. 인간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나 사회적 평가에서 벗어난 동물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부담 없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원영 책임연구원은 "동물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경쟁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SNS를 통해 동물의 일상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동물에게도 친숙함과 상상적 우정을 느끼게 된다. 동물마다 지닌 독특한 외형과 행동, 그리고 개성은 대중의 호기심과 애착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관심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더 넓은 팬덤으로 발전한다. 허창덕(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동물은 인간과 달리 배신 등의 감정적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낮다"며 "사람들이 동물의 행동과 이야기에 자신의 감정을 연결하고, 동물의 상황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 팬덤은 특정 동물을 중심으로 관심과 애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아이돌 팬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팬들은 동물의 사진과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관련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며, 이를 접한 사람들이 새로운 팬으로 유입되기도 한다. 특히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2차 창작물은 동물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팬덤을 유지하는 동력이 된다. 엄소연(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는 "SNS의 동물 콘텐츠는 빠른 공유와 포모* 현상 등이 작용해 사람들의 현장 참여를 증대시킨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접하던 사람들은 동물을 직접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다. 온라인에서 형성한 관심을 오프라인의 경험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은 좋아하는 동물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유대감을 형성한다. 황정혜(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경험 공유만으로도 소속감과 유대감이 생길 수 있다"며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창출된다"고 밝혔다.

특정 동물을 향한 애정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사회적 움직임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실제로 푸바오의 인기가 확산한 이후 판다 방사장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으며, 늑구의 사례를 계기로 동물원의 존재 의의와 사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도 이어졌다. 부캉이 역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부캉이를 지키기 위해 관광객의 부적절한 행동을 단속하는 '자경단' 활동을 벌이며 밤낮으로 부캉이를 보호했다. 이원영 책임연구원은 "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다른 생명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동물 팬덤 문화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지속적인 동물과 환경에 대한 고찰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모 : 대세에서 소외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조기현

돌봄을 받는 사람도 언제든 돌봄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특히 돌봄을 주는 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돌봄의 주체가 되는 상황은 막막하다. 막막한 현실에 놓인 이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N인분'의 조기현(34) 대표다. 스무 살 무렵부터 아버지를 돌봐온 그는 자신이 겪었던 '막막함'을 타인도 겪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희망과 함께 그는 누구도 돌봄을 이유로 나를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가족은 가족만이 돌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서로의 돌봄을 추구하는 그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자.

김가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돌봄의 무게를 'N인분'하다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가 되다

조 대표는 어릴 적 예술가를 꿈꿨다. 학력과 관계없이 예술가의 자리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며 사회가 정한 순리에 갇히지 않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스무 살 무렵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자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그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다. 병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는 일부터 식단과 약물 관리까지 돌봄에 필요한 일을 하나씩 배워야 했던 것이다.

"병원에서 보호자를 계속 찾는데 조건이 가족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를 맡게 된 거죠. 당시 만 19세였는데 중환자실 연대보증인 서명은 만 24세부터 가능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장벽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결국 아버지 일터 동료분께서 서명을 해주셔서 중환자실에 올라가게 됐죠."

돌봄은 아버지의 일상을 보조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다.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보는 등 돌봄에 관한 판단과 결정도 그의 몫이었다.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병원과 주민센터 등을 찾았지만, 아버지가 비교적 젊다는 이유 등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혼자 모든 과정을 혼자 해야 하다 보니 책임감이 막중했다.

"모든 창구가 봉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과는 부모님의 이혼에 관해서 서류상 이혼이라도 위장 이혼인 경우가 많다며 지원을 신청해도 안 될 거라고 얘기했죠. 장애인 혼자 사는 가구가 얼마나 힘든지를 언급하면서 사지 멀쩡한 자식이라도 있어 너무 좋은 가정 아니냐고 하니까 어려움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돌봄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혼자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아버지의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한 조 대표였지만, 마음 한 켠에는 이러한 삶에 처한 사실이 억울함으로 다가왔다. 돌봄을 당연하다시피 치부하는 사회의 분위기에 힘듦을 내색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 조 대표는 활자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전하기로 결심했다.

"돌봄을 하면서 글을 쓰는게 맞냐는 질타를 받을까 두려웠어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돌봄을 한 제가 돌봄에 대해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도 했죠. 그러다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저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려 하지 않으니 제가 나서보자고 했어요."



사진 : 황수민 기자

심사숙고 끝에 조 대표는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를 출간했다. 돌봄과 자신의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한 것이다. 나아가 가족을 돌보는 일을 개인의 사정으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가 함께 고민하기를 바랐다.

"이 책은 장면을 정말 상세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만 가난과 돌봄의 어려움을 단순히 '빈곤 포르노'처럼 전시하지 않겠다는 목적이 있었죠. 출판사에서는 처음에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다'라는 제목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선언이 책에서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돌봄으로 겪는 수많은 이야기를 포괄하는 제목인 '아빠의 아빠가 됐다'로 짓게 됐어요."

집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지만, 내면의 취약한 모습을 마주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3개월 동안 한 줄도 적지 못하던 조 대표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고민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로 했다. 그래야 누군가 바통을 이어받고 각자의 얘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 대표의 진심은 독자에게 정확히 닿았다.

"내가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3개월 동안 헤맸어요. 그러다가 그냥 나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생각에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그렇게 3개월 만에 첫 문장이 써졌어요."

조 대표의 속마음이 담긴 책이 발간됐고 독자들은 공감을 표현했다. 돌봄청년을 뜻하는 '영케어러'라는 단어도 조 대표의 책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언론의 주목과 행사 섭외 등의 연락이 쏟아졌다. 젊다는 이유로 돌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했던 문제들이 조 대표로 하여금 하나씩 해소돼갔다.

"제가 다 만든 건 아니지만 영케어러 지원 체계가 수립됐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 큰 일이에요. 무엇보다 '거울 같은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책이 됐다는 피드백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개인의 경험에서 공동체의 목소리로

조 대표는 책 출간을 넘어 같은 경험으로 모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다. 취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족 돌봄 안에서만 맴돌아야 했던 영케어러들을 모아 모임을 만들었다. 2021년에 영케어러 5, 6명이 모여 구글 미트나 줌 등을 활용해 화상으로 모임을 가졌으며 서로 돌아가면서 모임의 진행자가 되기도 하고 돌봄에 관한 시 쓰기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N인분' 의 시작이었다.

"사실 공동체는 책을 쓰기 전부터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확인이 필요하기도 했죠. 그렇게 온라인 모임을 가지다가 요구만 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2023년 비영리 단체 'N인분'을 설립해 사업을 확장했어요."

'N인분'은 한 명의 영케어러가 많은 몫을 혼자 해낸다는 의미와, 영케어러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사회가 그 책임을 N개로 나눠야 한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N인분은 설립 당시 '돌봄 청년 커뮤니티 n인분'에서 현재 '돌봄 커뮤니티 N인분'으로 바뀌었다. 청년과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함께하고 싶으면 함께해야 한다는 일념 하에서였다. 그렇게 작년 돌봄안전망을 확대하고자 소문자 n에서 대문자 N으로 단체명을 변경했다.

"대표적인 N인분 활동으로 '영영케어 동료 상담'이 있어요. 나만의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돌봄이 처음 돌봄을 시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누군가를 돌봐본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느낀 막막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미 경험한 동료가 얘기해 주는 상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한 사업이죠. 돌보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당당하게 자신의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체 운영에는 어려움 또한 존재한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적절히 가닿기 위해서는 매칭이 선사돼야 하지만 그 매개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 대표는 영케어러간의 유연한 연결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보통 복지관 중심으로 양성된 상담가들이 파견되곤 해요. 하지만 중간 매개가 굉장히 어렵죠. 연계나 상담도 결국 복지관 안에 들어온 사람만 가능하니까요. 그런 지점은 풀어갈 숙제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향해

N인분이 추구하는 사회의 방향성은 '돌봄을 해도 괜찮고, 돌보고 싶은 사회다. 조 대표는 돌봄을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의무로만 여기는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결국 개인의 희생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한다. 돌봄을 당사자만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돌보면 폐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존해도 되는 사회가 돼야 해요. 돌봄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돌봄을 하더라도 피해 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돌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조 대표는 돌봄이 특정 가족이나 개인에게만 맡겨지지 않도록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에서도 돌봄 당사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는 늘 문제 해결과 치유는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제 해결만 신경쓰느라 서로의 돌봄에 소홀해져도 안되고, 돌봄에만 치우쳐 부족주의적으로 가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제도는 동거를 기준으로 지원한다거나 학업·취업에 심각한 곤란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영케어러의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N인분은 앞으로도 돌봄 당사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와 동료 상담 활동을 이어가며 정책 개선과 인식 변화에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조 대표는 돌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누구나 살아가며 돌봄을 주고받는 만큼, 돌봄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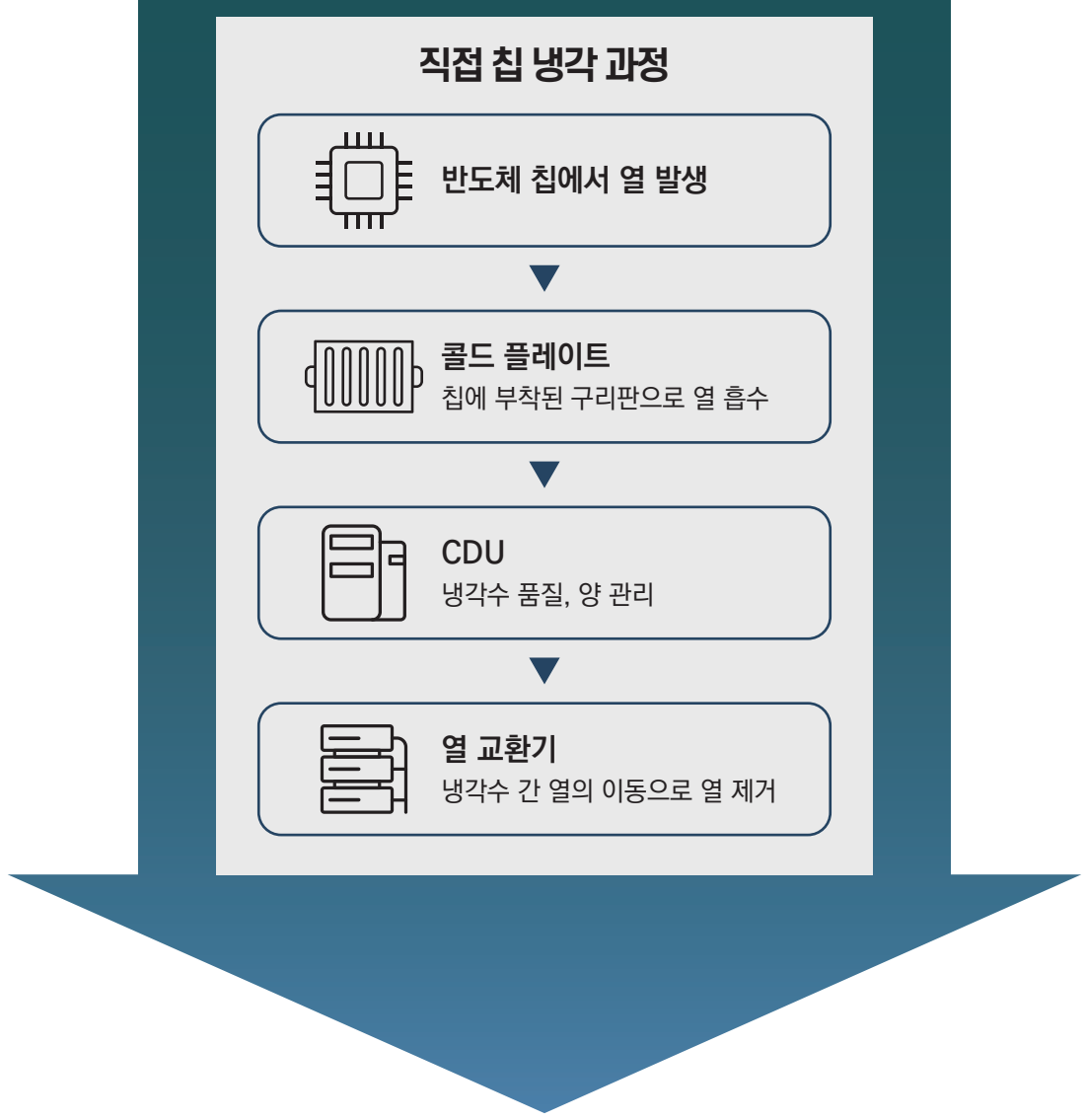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게 지금 우리 삶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돌봄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우리 삶에 계속 필요한 일이죠. 서로 돌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삶의 어느 순간에는 정말 돌봄이 필요한 때가 오거든요. 그때 돌봄의 필요성을 떠올릴 수 있으면 충분해요. 돌봄이 아직은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공동체를 유지하는 귀한 길이니까요."



사진 제공 : 조기현 대표



칩의 열기를 잠재우다



뜨거운 데이터센터에 냉각수 처방이 내려졌다. 인공지능(이하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열관리 기술이 데이터센터의 성능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 고성능 반도체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기존 방식보다 약 23배가량 신속히 제거하는 '직접 칩 냉각(이하 D2C)' 기술이 새로운 냉각 방식으로 대두된다.

반도체의 성능을 지키는 냉각

데이터센터의 열을 식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데이터센터는 기업과 기관 등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탑재된 AI모델을 통해 처리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내부에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핵심 반도체가 탑재돼 있다. 최근에는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고성능·고밀도의 반도체가 도입되는 추세다. 이에 반도체의 과열이 심해지고 성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제기된다. 유동인(국립부경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연산량이 많아지면서 과도한 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열이 반도체 전체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연산이 집중되는 일부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데이터센터에서는 주로 '공랭식 냉각' 기술을 이용해 열을 제거했다. 공랭식 냉각은 팬을 이용해 서버에 바람을 불어넣고 부품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공랭식 냉각만으로는 증가하는 발열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유 교수는 "공랭식 냉각으로 더 많은 열을 제거하려면 더 많은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팬의 소음과 전력 소비가 커지는 문제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D2C(Direct to Chip) 기술이다. D2C 기술은 발열이 집중되는 반도체에 금속 냉각판을 부착하고 내부에 냉각수를 순환시켜 열을 제거하는 냉각 기술이다. D2C 기술은 냉각수를 사용해 공랭식 방식보다 열을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액체는 기체보다 열전도율이 높아 냉각수를 이용하면 공기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반도체의 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진균(국립한밭대학교 건축설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물은 공기에 비해 분자가 촘촘히 밀집돼 있어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다

D2C 기술은 ▲콜드 플레이트 ▲냉각수 분배 장치(Coolant Distribution Unit, 이하 CDU) ▲열 교환기 등을 거쳐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먼저 콜드 플레이트를 통해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한다. 콜드 플레이트는 반도체 표면에 부착되는 금속 냉각판이다. 반도체와 직접 맞닿아 있어 열을 흡수한 뒤 내부를 흐르는 냉각수로 열을 전달한다.

콜드 플레이트 내부에는 냉각수가 흐르는 미세한 통로인 '매니폴드(Manifold)'가 형성돼 있다. 매니폴드는 냉각수와 금속 표면이 접촉하는 면적을 넓혀 효율적인 열의 이동을 돕는다. 냉각수가 필요한 부위에만 얇은 배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적은 양의 물로도 효율적인 냉각이 가능하다. 이때 콜드 플레이트로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CDU 내에 설치된 펌프가 작동한다. 펌프가 냉각수를 밀어내면 냉각수는 그 힘을 받고 매니폴드를 따라 콜드 플레이트 내부를 순환하게 된다. 함정균(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매니폴드는 냉각수를 콜드 플레이트 표면에 고르게 분배하고 열을 흡수한 냉각수를 회수한다"고 말했다.

열을 흡수한 냉각수는 배관을 따라 콜드 플레이트에서 다시 CDU로 이동한다. CDU는 냉각수의 온도와 양을 관리하고 순환을 유지하는 장치다. CDU 내에 설치된 펌프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압력으로 냉각수의 흐름과 압력을 조절한다. 이를 통해 서버 내부로 공급되는 냉각수의 순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반도체에서 발생한 열을 지속적으로 운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조 교수는 "냉각수의 온도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반도체 가동 성능이 떨어질 위험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특히 CDU 내부에 설치된 여과 장치는 냉각수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기구다. 대표적으로 0.2마이크론 크기의 입자까지 여과하는 장치가 사용된다. 해당 장치는 박테리아와 미세한 이물질 등을 물리적으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실험실과 병원, 반도체 제조 시설 등에서도 폭넓게 활용된다. 냉각수에 포함된 이물질이 서버 내부의 미세한 통로로 유입되면 냉각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필터를 통한 관리가 요구되는 이유다. 함 교수는 "냉각수에 포함된 금속 입자나 부식 생성물, 침전물 등이 미세한 통로를 막을 수 있다"며 "통로에 이물질이 쌓이면 냉각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 필터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DU로 들어와 여과 장치를 거친 냉각수는 CDU 내부에 설치된 열 교환기로 이동한다. 열 교환기는 콜드 플레이트에서 흡수한 열을 외부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다. 이때 냉각수 자체를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열만을 외부의 냉각수로 전달한다. 두 냉각수 사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온도가 높은 냉각수와 낮은 냉각수가 금속판이나 관벽을 사이에 두고 흐르면 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도된다. 조 교수는 "열 교환기에서는 온도가 높은 냉각수에서 금속판으로 열이 전달되고 다시 금속판에서 온도가 낮은 시설 냉각수로 열이 이동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열 교환기 거친 냉각수는 냉각탑***이나 드라이 쿨러**** 등 외부 냉각 설비로 이동한다. 온도가 낮아진 냉각수는 다시 열 교환기로 돌아와 열을 전달받는 과정을 반복한다. 함 교수는 "냉각탑은 물의 일부를 증발시켜 열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드라이 쿨러는 팬의 성능에 따라 냉각 효율이 좌우된다"고 말했다.

성능을 넘어 안정성까지

전문가들은 D2C 기술이 기존 공랭식 냉각의 한계를 보완하는 주요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2024년 미국의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문기관인 '업타임 인스티튜트(Uptime Institut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약 22%가 이미 D2C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 61%가 향후 활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유 교수는 "콜드 플레이트를 이용한 냉각 기술은 전기자동차, 의료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향후 기술의 성능과 안정성이 향상된다면 D2C 기술의 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2C 기술은 냉각수가 흐르는 배관이 반도체와 맞닿아 있어 누수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냉각수가 전자 부품에 유입돼 서버 설비에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함 교수는 "누수에 대비하려면 콜드 플레이트와 배관, 연결부에 사용되는 소재가 냉각수와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설비 전체를 특수 열전도성 액체에 담가 열을 식히는 '액침냉각' 방식이 활발히 연구되는 추세다. 액침냉각은 서버 등 전자 장비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 발열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냉각액은 공기나 물보다 열전도율이 높은 액체를 사용해 많은 열을 흡수하는 데 유리하다. 유 교수는 "냉각액이 반도체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냉각판을 거치는 D2C 기술보다 열을 전달하는 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처리장치 : 컴퓨터 등에서 프로그램 실행 등의 명령을 인지하고 실행을 지시하는 부품

**그래픽처리장치 : 컴퓨터 등의 화면에 그림, 영상, 등을 빠르게 완성하는 부품

***냉각탑 : 산업 공정, 발전소, 대형 건물 등에서 발생한 뜨거운 냉각수를 외부 공기와 접촉시켜 열을 낮추는 장치

****드라이 쿨러 : 냉각수를 코일 내부에 순환시키고 장착된 팬을 이용해 온도를 낮추는 장치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조급한 인재 양성이 놓친 것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8년의 시간을 5년 6개월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공계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사부터 석사와 박사 과정을 연계해 운영하는 '학·석·박 통합연계과정(이하 학·석·박 연계과정)'을 추진 중이다. 학부 단계부터 연구에 참여하도록 해 전문 인재를 일찍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본교 역시 이번 학칙 개정을 통해 해당 과정을 신설했다.

학·석·박 연계과정은 학부 단계부터 연구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재 양성 경로로 기능할 수 있다. 학부생 시절부터 연구 전반을 경험하며 교육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자연스러운 대학원 진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위 취득 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 사회 진출은 연구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유인책이다.

하지만 단축된 학위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기준은 부족하다. 대부분 대학은 학부 재학 중 대학원 교과목을 미리 이수하고 이를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 중이다. 대학에 따라 논문이나 종합시험이 면제되기도 한다.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이 그 일례다. 대학원 이수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해당 교과목이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충족하는지, 학생이 충분한 연구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인하고 평가할 구체적인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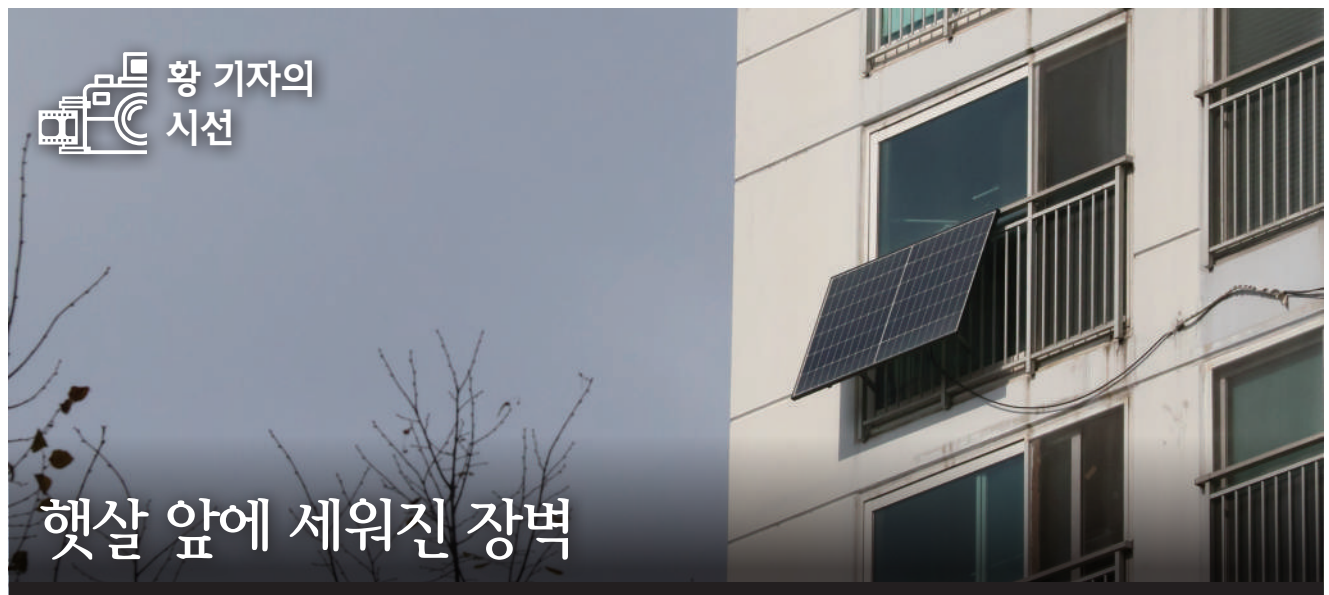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또다시 '속도전'이다. 학·석·박 연계과정은 KAIST가 2023년에 석·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1년 단축하는 'TUBE'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이미 추진된 바 있다. 이때 도입 첫 학기 지원자 0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 무려 2년 6개월을 단축한 '학·석·박 패스트트랙'을 도입시켰다. 수년 전부터 교육의 질과 실용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으나 학위 취득 기간을 줄이는 데만 집중한 셈이다. 그 결과는 2025년 기준 서울대와 부산대의 연계과정 지원자가 단 1~2명에 그치는 도돌이표를 그렸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연구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당초 정책의 본질 아니었는가. 인재를 키우겠다면서 정작 학생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배움의 질은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연구 학생 개개인이 어떤 성취를 이루는지보다 학위 수여자 수를 늘리는 보여주기식 실적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진정으로 인재를 키울 생각이 있다면, 제대로 된 관리 체계와 엄격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본교도 지난 10월 6일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며 학·석·박 연계과정을 신설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피어날 연구자들의 내일이다. 박사 모를 찍어내는 '학위 공장'이 아니라, 깊이 있는 배움이 머무는 자리를 먼저 내어주기를. 진짜 인재의 요람으로 당당히 비상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혜윤 편집국장

황 기자의 시선



햇살 앞에 세워진 장벽

자가용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설치 현장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주민의 참여는 가로막힌 현실이다. 일부 아파트는 관리 규약상 금지 조항이 없는데도 설치를 불허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안전성과 주변 영향에 대한 검토보다 막연한 우려와 민원 회피가 앞선 셈이다. 설치를 원하는 주민조차 나서기 어려운 현실에서 지원 확대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집집마다 햇빛을 들이려면 현장에서 닫힌 문부터 열어야 한다.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기자수첩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최근 대학가에 디지털성범죄의 그림자가 떠나질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인근의 고려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대학가에서 반복되는 이유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는 없다. 왜곡된 성(性)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충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구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물론 사회가 성별에 따라 부여하는 역할과 기대, 그에 따른 관계와 권력의 문제까지 포괄한다. 사회 속에서 성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함과 동시에 타인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성이란 '타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대학은 성을 대상화하는 문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차별적 표현이 여전히 등장한다. 과거와 달리 차별하지 않는다는 논조를 둔갑하고 농담이나 유머로 포장되면서 문제의식 없이 소비되는 경우도 적잖게 목격된다. 차별적 언행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타인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까지 충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왜곡된 성 문화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빼앗기는 실정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고 타자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동아리와 자치 기구도 하나둘씩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오가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할 대학이 오히려 학생들의 논의 공간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동아리 '정정헌'이 30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수에도 불구하고 인원 미달 등을 이유로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된 것이 일례다.

학문과 소양을 함양하는 집단인 대학에서 언제부터 '성'에 대해 쉬쉬했을까. 자신과 타인의 성별, 정체성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 역시 교육의 중요한 역할일 테다. 대학 내 성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구성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다양한 성에 관한 논의로 확장돼야 한다. 성별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도 품격 있는 대화가 오가는 문화를 기대한다.

김가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낙산만평



김가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낙산에 올라

세 번째 사과가 사라지는 순간

인류를 바꾼 세계 3대 사과를 말할 때 사람들은 보통 아담과 이브, 아이작 뉴턴, 그리고 폴 세잔의 사과를 떠올린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목록이 조금 바뀌고 있다. 사람들은 세 번째 사과가 폴 세잔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변화는 현대 사회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른다. 요즘 사회는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중심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새로운 기술과 빠른 혁신 그리고 생산성과 효율 같은 것들이 가장 큰 가치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인류를 바꾼 사과의 자리에도 예술가보다 기술 혁신가가 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말 기술뿐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폴 세잔이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다. 들어본 적은 있을지라도 그가 무엇을 그렸는지, 어떤 화가였는지, 특히 사과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세잔이 아담과 이브, 뉴턴과 함께 인류를 바꾼 사과로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히 사과를 많이 그렸기 때문이 아니다. 세잔은 미술계의 혁신을 일으켰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다. 전통적인 원근법에서 벗어나 공간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폴 세잔은 미술계의 전환점을 형성했다. 그의 사과는 단순한 정물이 아니라 형태와 구조, 시선을 새롭게 탐구한 결과였다. 결국 미술계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흥미로운 점은 세잔에게는 아담과 이브, 뉴턴, 스티브 잡스만큼 상징적인 사과 이미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인류를 바꾼 사과라는 개념은 상징성과 유명세가 아니라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폴 세잔이 남긴 변화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의 사과를 기억해야 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예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사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점점 더 기술이 사고를 대신하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 필요한 것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술의 역할이다.

이수언(사회과학 1)



한성대신문 오피니언면은
학내구성원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의화정

패션의 미래는 기술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

인공지능(AI)이 패션산업의 풍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AI가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고,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하며, 가상의 모델이 실제 사람을 대신해 광고에 등장한다. 이제 패션은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던 산업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이 경쟁력이 되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술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패션의 가치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나는 그 답이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패션은 단순히 옷을 사고 입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 취향과 정체성을 표현하고, 때로는 소속감을 느끼며,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낸다. 같은 옷이라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를 갖는다. 소비자의 선택에는 데이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과 경험, 문화적 맥락이 존재한다.

패션마케팅을 연구하며 흥미롭게 느끼는 점도 바로 이러한 소비자의 복잡한 마음이다. 소비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만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익숙한 브랜드에 애착을 느끼기도 하고, 우연히 접한 콘텐츠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한다. AI는 이러한 행동의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무엇에 공감하고 왜 특정 브랜드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기에 미래의 패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은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과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의 조화다. 데이터를 읽되 숫자 너머의 소비자를 바라보고, AI로 콘텐츠를 만들되 그 안에 어떤 메시지와 가치를 담을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미래 경쟁력이 될 것이다. 대학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비자의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경험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기술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 자체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기술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이다. 패션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공감 능력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패션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일 것이다.

신은정(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수

동정란

김보름(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 교수는 지난 10월 〈트렌드 리터러시〉 도서를 발간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동문회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동문회는 지난 10월 국가정책의 형평성과 혁신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 창 원 편집인겸주간 김 남 용 편집국장 김 혜 윤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좁은 교실의 외침 프랑스를 뒤흔들다

〈편집자주〉

현대판 '레 미제라블'이 도래했다. 교육 환경 악화에 항의하며 시작된 학생들의 시위는 생활비 부담과 공공서비스 문제로 번졌으며 이제 유럽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프랑스를 넘어 유럽 사회 전체가 과제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의 상황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왔기에 프랑스의 실태를 살펴볼만 하다. '아비규환' 프랑스의 속내를 들여다보자.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지난 9월, 시위는 파리 외곽 크레테유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 이후 시민들의 참여가 잇따르면서 파리 전역과 마르세유 등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는 약 한 달 만에 이탈리아와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각국으로 번졌다. 소득 격차, 물가 상승 등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잠재돼 있던 시민들의 불만이 프랑스 시위를 기폭제 삼아 터져 나온 셈이다. 문종현(경상국립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는 "이번 시위에서 고등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에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시위의 출발은 2018년 '노란 조끼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유류세 인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자동차를 주요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프랑스 시민들과 저소득 노동자들은 세금 인상이 생계 부담을 키운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2018년 11월, 노란 조끼를 입은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다. 유류세 인상 반대에서 출발한 시위는 이내 물가 상승과 소득 불평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는 시위로 번졌다.

당시 시위는 정부의 정책 철회까지 이끌어냈다. 프랑스 정부는 시위가 거세지자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에 누적된 시민들의 불만은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시위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번 시위에서 다시금 드러났다. 교사 부족과 노후화된 학교 시설, 지역 간 교육격차에 항의하며 시작된 학생들의 움직임은 공공서비스 전체에 대한 불만으로 번졌다. 과거 노란 조끼 운동이 생활비 부담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반발로 번졌다면 이번 시위는 교육 현장의 문제를 통해 프랑스의 재정 체계 부담을 드러낸 셈이다. 김진영(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그간 프랑스의 시위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불만이 거리로 표출되면 참여의 폭이 넓어지는 양상이 자주 나타나 왔다"고 전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프랑스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프랑스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부족과 과밀학급, 노후 시설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공립 중·고등학교 수업의 7.5% 이상은 교원 부재로 방치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냉방시설이 부족해 대학 입학시험인 '바칼로레아'를 지하 주차장의 임시 시험장에서 치르기도 했다. 남성욱(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는 "프랑스 일부 학교에서는 쥐와 바퀴벌레가 나오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열악한 교육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위가 이어지면서 프랑스의 일상생활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이 중단됐으며 대중교통 운행도 제한됐다. 루브르 박물관 등 관광·문화시설의 운영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해외 관광객과 한국인 여행객, 유학생의 이동과 일정에도 불편이 발생했다. 현재 시위는 교육 문제를 넘어 공공서비스와 생활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위에는 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노동조합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했다. 프랑스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 기준 시위 참여자는 약 41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프랑스 전역에서 체포된 인원은 1,314명에 달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2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치안 관계 부처 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그 어떤 시위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부가 시위 통제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정부와 시위대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윤성욱(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마크롱 정부는 정당한 요구와 폭력·파괴 행위를 구분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부 집회의 금지나 제한을 포함하는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는 벨기에와 이탈리아, 그리스 등 다른 유럽 국가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벨기에에서는 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가 일어나 대중교통과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벨기에는 프랑스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웃 국가다.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프랑스 학생들의 시위가 이들에게 도화선이 된 셈이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 프랑스와 인접한 국가들에서 생활비, 주거비 상승, 공공서비스 악화에 대한 불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문 교수는 "프랑스 인근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공통된 불만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형국에서 '감당 가능성(Affordability)'이 이번 시위를 관통한다. 감당 가능성은 개인이나 정부가 특정 비용과 부담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하지만 시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보장받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와 재정 여건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불만이 시위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손동기(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보다 정부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국가부채와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럽 각국에서는 고령화와 국가부채 증가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 등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부채까지 증가하면서 재정 운용의 부담이 가중된다. 글로벌 경제 데이터 플랫폼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의 부채는 GDP 대비 81.5%에 달한다. 손 교수는 "유럽연합의 재정 문제는 단순한 재정 부족의 차원을 넘어 기존 산업과 노동력의 생존 여부와도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문제는 개별 정책을 넘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도 연결된다. 프랑스뿐 아니라 벨기에와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서도 교육과 공공서비스,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진다.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국가 재정 운용에서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김 교수는 "교육이나 의료 지출을 줄여 당장의 재정을 개선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부담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감당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다. 공교육의 역할과 의료비와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비용이 점점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공교육만으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지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과 주거 등 필수적인 생활 영역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국가의 공공서비스 보장 정도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프랑스 국기를 들고 있다.

이번 시위는 공공서비스 개선 요구가 사회 전반의 불만과 결합하게 되면 시위가 장기화되며 참여 집단도 확대될 수 있다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처음에는 학교 현장의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대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노동조합 등이 합류하면서 요구가 다양해졌다.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이 생활비와 주거비, 정부 재정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 것이다. 김 교수는 "이번 시위는 특정 법안의 철회나 정책 변경처럼 하나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격차에서 나아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세대 간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교육·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세대의 재정 부담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누릴 기회와 복지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윤 교수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재정 부담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 갈등은 한국에도 교육·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면 지역별 교육 수요와 의료 접근성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역별 수요와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은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숙제"라며 "복지의 제공과 거둬들이는 세금 간 간극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역설했다.

청년과 학생의 불만을 일시적인 반발로 여기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프랑스 시위는 교육 환경과 생활비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취업과 주거 불안, 교육격차 등 청년층이 겪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향을 받는 청년과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 교수는 "학생들이 교육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